

부품·소재 기술개발 공모, 전기전자 123건으로 1위

산업자원부가 2001년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제1차 지원대상으로 공고한 7대 핵심 부품·소재분야의 204개 부문을 공모한 결과 전기전자부품 분야가 123건으로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지난 3월 26일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제1차 공모를 시행해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접수를 한 결과 124개 부문에 총 269개 과제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청결과는 지난해 1차 공모결과보다 78.1% 증가한 것으로 이는 원천기술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는 핵심 부품·소재를 투자기관, 정부,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기업들의 높

은 열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품·소재 분야별 신청건수는 전기전자부품 123건(45.7%), 기계류부품 61건(22.7%), 화학·섬유소재 41건(15.3%), 금속소재 27건(10.0%), 자동차부품 17건(6.3%) 등이며 이번 신청결과와 가장 큰 특징은 기계류부품과 금속소재의 신청이 지난해보다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다.

신청기관별로는 기업 255건(94.8%), 연구기관 8건(3.0%), 대학 및 기타 6건(2.2%)으로 기업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에 신청한 269개 과제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6천260억원으로 이중 정부출연금 신청은 3천787억원에 달한다.

산업자원부 “효율등급표시제품의 최저효율기준 조정안” 발표

40W 형광램프 및 전용안정기의 생산이 사실상 2004년부터 중단된다.

산업자원부는 ‘효율등급표시제품의 최저효율기준 조정안’을 발표하고 형광램프는 오는 2004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효율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40W 형광램프 직관형의 경우 현재 66.0 lm/W에서 88.0 lm/W으로 효율개선율이 33.3%에 이른다.

또 40W 형광램프 등근형은 58.8 lm/W에서 64.0 lm/W로 조정, 효율을 8.8% 높인다는 방침

이다.

업계는 그러나 산자부가 내놓은 조정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40W 형광램프의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광램프 보급률은 고효율제품인 32W가 약 20%, 40W가 80%에 달해 40W 형광램프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산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형광램프 및 안정기제조업체 관계자들

은 “안정기의 수명이 10년에 달하는데 3년간의 유험기간을 두고 형광램프와 안정기의 생산을 중단하라고 한다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현재 40W가 26mm 32W로 자연스럽게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램프와 등기구를 전량 교체하라고 한다면 수용가들의 부담도 커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는 “업체가 주장하는 명분

은 계속 거론됐던 것들이다”고 전제하고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의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최저효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베이트등을 실시해 업체와 수용가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을 적용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자원부, 지식기반교육정보망 가동

산업자원부는 최근 근로자에게 전문교육기회를 지속 정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식기반교육정보망 ‘케듀넷’(KEDUNET)을 구축하고 정보서비스를 시작했다.

케듀넷은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각종 교육기관의 전문교육 및 훈련정보를 제공하고 근로자와 교육기관을 연계시켜 주는 교육정보서비스망이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해 생산성본부, 대한상의, 표준협회, 생산기술연구원 등 교육훈련기관과 업종별협회 및 단체에서 운영중인 전문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번 서비스는 검색과 중개, 교육정보, 평가 등 4개의 서비스로 구성된다.

검색서비스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강사, 연수시

설 등에 대해 지역·분야·기간별로 검색기능을 제공하며 중개서비스는 교육컨텐츠와 강사를 피교육자에게 연결시켜 준다.

또 교육정보서비스는 각종 최신뉴스를 제공하며 평가서비스는 수강자의 평가를 통해 강의수준정보를 제공한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교육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교육기관은 시장정보와 기관홍보에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케듀넷의 구축으로 사이버상에서 근로자와 교육기관간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문교육 컨텐츠 개발을 통해 케듀넷을 근로자중심의 종합교육서비스망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시장 규제·감독기구 전기위원회 탄생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경쟁구도로 재편된 전

력시장을 감시하게 될 전기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초대 전기위원회를 구성할 이승훈 비상임위원장과 김창준·남정일·박종근·정갑영·조배숙·정광모·백영기 위원 등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부 과천청사 3동에서 전기위원회 현판식을 거행했다.

정부는 전기위원회의 이번 발족은 6개 발전회사 분할과 전력거래소가 설립된데 따른 '완결판'으로서 우리나라도 정식적인 전력경쟁시대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전기위원회 초대 위원장(차관급)으로는 한전에 대한 경영진단 참여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위원장, 민영화연구기획팀장을 역임하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작업에 깊이 관여해 온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교수가 위촉됐다.

위원 7인은 전기단체 및 학계·경제학계·법률계·소비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전기계에서는 김창준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을 비롯 남정일 과학문화연구원 연구위원, 박종근 서울대

기초전력공동공학연구소 소장이 입성했다.

또 경제학계에서는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 부교수, 법률계 대표로는 조배숙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겸 변호사, 소비자단체에서는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각각 발탁됐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백영기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와 함께 전기위원회 실무를 맡게될 사무국은 김영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을 사무국장으로 총괄정책과, 시장관리과, 계통운영과, 전기소비자보호과, 경쟁기획과 등 5개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기위원회는 앞으로 그동안 전력산업구조개편단이 수행해 왔던 구조개편업무와 전기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전기요금 및 공정한 경쟁제도 심의를 하고 전기사업자간 분쟁 조정, 불공정행위 조사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또 전기위원회 산하에 법률조정, 전기요금, 전력계통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실태 전면조사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태 조사에 나선다.

중기특위의 관계자는 총리실, 중기특위, 중기청, 조달청, 중소기업협중앙회, 산업연구원, 건설단체 등이 참여해 79개 공공구매 기관중 10개를 선정, 중기제품 구매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대상 기관은 조달청, 한국통신, 주택공사, 도로공사, 농업기반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 경기도, 대구광역시 부산교육청 등 10개 공공기관이다.

중기특위는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구매체계, 대금결제방식,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분리발주) 실태 및 제도개선 과제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연구원과 함께 구매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0월중 중기특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특위는 12개부터, 80여중에 달하는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재정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정책자금분과위원회'를 운

영기로 했다.

기술표준원, 7월부터 전기용품 안전 기준 강화

오는 7월부터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또 전기용품 인증 수수료도 자율화됨에 따라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기술표준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새로운 안전인증제도에 의거해 오는 7월 1일부터 2003년 6월까지 현행 안전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국제기준(IEC)으로 전기용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품목이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별도의 안전인증 없이 제조·판매되던 일부 전기기기류와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정보·사무기기 등도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방오균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과장은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대상이 확대된 것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정한 국제기준에 국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까지 수출용과 내수용의 품질기준을 달리했던 국내 제조업체로서는 내수용도 국제기준으로 품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제품을 포함해 수입되는 외국산에 대해서도 동일한 인증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별다른 안전인증없이 마구잡이로 수입되던 저가의 외국산 제품 수입을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조치로 국내 전기제품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일부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전기제품에 의한 소

비자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나경수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정품보다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값싼 제품을 더 선호하면서 그간 부실한 전기제품의 소비자 안전에 큰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안전인증 대상 확대와 안전기준 강화로 소비자 안전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된 제품 생산업체 일부에서는 인증을 획득키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 등을 들어 반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용산전자상가 상인들을 중심으로한 조립PC 제조업자들의 반발로 산업자원부와 기술표준원은 조립PC의 경우 피워서블라이 등 일부 안전인증을 받은 핵심부품을 사용할 경우 조립PC에 대해서는 안전인증을 연기 내지는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전기제품 제조업체 대표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일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과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추가된다”며 “특히 지금도 3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상이 확대되면 인증 취득을 위한 대기기간이 더욱 길어져 적기에 제품을 시장에 못내놓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전기제품 안전인증 대상 확대와 함께 인증기관의 시험수수료가 자율화되면서 수수료 자체도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IEC규격기준 적용시기

제 조 구 분	품목수	품 목 예 시	IEC규격 적용시기
전선류 및 전원코드	15	절연전선, 케이블코드 등	2003년 7월 1일
전기기기용 스위치	9	고리퓨즈, 온도퓨즈 등	"
교류용 전기기기 또는 전원용 캐패시터	3	휴대발전기, 농형3상유도전동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10	꽃음플러그, 콘센트 등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7	관형퓨즈, 배선용차단기 등	"
절연변압기	3	전압조정기, 가정용 소형변압기 등	"
전기기기류	72(56)	전기스토브, 선풍기, 전기냉장고 등	"
전동공구	8	전기그라인더, 전기샌더 등	"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8(29)	텔레비전수상기, 게임기구 등	"
정보·사무기기	6(40)	모니터, 프린터 등	"
조명기기	31	형광램프용 글로우스타터, 형광등기구 등	"
계	172(125)	()안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실시 품목임. 따라서 2001년 7월 1일 이후는 297품목임.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인증기관을 민영화하면서 그간 시험수수료가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고 판단해, 그간 고시를 통해 수수료의 상한선을 두었던 것을 폐지하고 올 7월부터는 시험수수료를 자율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시험수수료가 외국 인증기관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을 벌려왔던 3개 인증기관(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자과장해공동연구소)은 조만간 큰 폭의 수수료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中企 기술개발 675억 지원 확정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자금 중 일반과제(특히기술개발과제 포함)의 지원업체 1,035 업체를 선정하고 6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업체는 정보통신분야가 248개 업체(24.0%)

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분야가 242개 업체(23.4%), 전기전자 232개 업체(2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섬유, 금속, 환경, 디자인 등의 분야는 각각 1~2%에 그쳐 대조를 이루었다.

1,035개 업체 가운데 벤처기업은 652개 업체로 63.2%를 차지했으며 지원대상 기업의 85.9%인 889개 업체가 50인 이하 소기업이다. 지원금액이 6,000~7,000만원인 업체는 52.3%인 541개 업체로 가장 많았으며 8,000만원 이상인 업체도 9개나 선정됐다.

중기청은 이달 중 선정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정부출연금 50%)을 지급하며 하반기 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성과금(나머지 50%)를 지급할 계획이다.

● 기술혁신개발사업 선정업체 현황

(단위 : 개, %)

구분	업체수	점유비율
기 계	242	23.4
전 기 전 자	232	22.4
정 보 통 신	248	24.0
화 학	132	12.8
섬 유	18	1.7
금 속	15	1.5
요 업	21	2.0
디 자 인 생 활	23	2.2
환 경 에 너 지	56	5.4
생 산 기 반	48	4.6
합 계	1,035	100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부품소재기업들이 수출과 관련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해외시장 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글로벌 경쟁의 취약요소로 해외마케팅 부족, 시장변화에 따른 제품변환 유연성 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30일간 종업원 100인 이상 부품소재기업 1,29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품소재산업 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에는 815개 업체가 답해 62.7%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따르면 부품소재기업들이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정보제공(47%)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이라고 답했다. 자금자원(36.0%), 인증규격 획득지원(7.6%), 전시회참가 및 개최(7.1%), 수출 촉진단 파견(4.1%) 등이 뒤를 따랐다. 또 글로벌 경쟁 취약요소로 품질이나 가격보다 해외마케팅 능력, 시장변화에 따른 제품변환 능력과 같은 유연성 부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애로사항으로 전문기술인력의 부족(48.1%)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보유기술 및 연구시설의 부족(23.3%) △기술개발 자금부족(19.0%) △세제등 제도적 지원 미흡(8.0%) 등의 순이었다.

한편 대상업체들은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은 70%, 가격이나 종합경쟁력은 85%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낮은 수준의 기술개발 투자로 기술력 격차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자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달중에 ‘부품소재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 관계자는 “기업과 정부, 학계가 연계해 핵심기술개발, 판로확대를 위한 신뢰성 인증 및 보장제도 확대, 해외시장개척과 선진기업과의 투자협력 등에 대한 종합전략을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확대 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상품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렸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이 논의되는 품목은 접수된 총 28개중 에너지관리공단 내·외부 전문가가 심사, 최종 선정된 LED신호등·전력용 몰드변압기·지능형수배전반 등 5개 품목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조업체·협단체·시험기관·학계·연구소 등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 품목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을 놓고 열띤 논의를 펼쳤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어용모터 표준화 국제화 작업 진행

정부는 날로 높아지는 국제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전기·전자 등 산업 각 분야의 기술기준 국제 표준화 작업을 세계 각국의 표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이와관련 제어용 모터 분야 국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표준화활동 및 국가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제어용 모터는 전기·전자·기계 및 제어 공학분야가 복합된 기술로 자동차·통신기기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속화 고정밀화 소형 경량화로 인해 저소음 저

진동 저소비전력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나 명확한 각국의 기준이 없이 이번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어용 모터의 국제표준화 활동(IEC/TC2·회전기기분야) 및 국가 표준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국내업체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표준원은 국내 제어용모터 산업의 기술 선진화를 위해 미국 표준기관인 NEMA, SMMA, 독일의 VDE 등과 국제 기술협력을 통해 국가표준의 국제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과제공모제로 중소기업 참여 확대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

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컨소시엄 사업자를 대폭 확대해 올해에는 173개 컨소시엄에 2천246개 과제, 2천418개 기업을 대상으로 28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146개 컨소시엄에 1천795개 과제 1천870개 기업을 대상으로 210억원을 지원한 것에 비해 개발과제는 25.1%, 지원기업은 29.3%가 늘어난 것이다. 올해에는 특히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자체에서 '과제공모제'를 실시해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또 지역별로 경쟁시스템을 도입, 지역별 지원대상 컨소시엄 수를 정해 등급별로 차

등지원함으로써 우수한 대학 및 과제를 선별해 선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대학·연구기관과의 자율적 협력체제 구축이 활성화 되도록 향후 민간 평가기관을 활용해 이번 사업의 지원성과를 분석, 지속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은 당초 확보한 350억원의 예산중 약 50여억원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기반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자조달 한창

조달비용 절감과 전자상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자조달 활성화가 한창이다.

정부는 올해 20개 공기업의 총 조달액 11조7천9백61억원 중 11.7%인 1조3천832억원을 전자조달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기획예산처가 밝혔다.

지난해 정부가 전자조달로 확보한 정부조달 물량은 전체 조달물량의 6.4%에 해당하는 8천1백88억원, 올해 전자조달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약 70% 늘어난 규모로 단순 물품은 총 조달액 1천5백90억원의 53.2%, 원자재는 4조8천9백3억원의 24.5%를 전자조달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전, 한통 등 자체 조달시스템을 확보한 7개 공기업의 전자조달 비율을 총 조달액 10조1천5백36억원의 12.6%인 1조2천7백47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작년 한해 7개 공기업의 전자조달 규모는 총 조달액 10조6천9백47억원의 7.6% 규모인 8천95억원 정도이다.

정부는 한편 20개 공기업의 전자조달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전자조달 결과를 내년도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전자조달 제도의 조기 정착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시설자재 전자목록 고시

조달청이 본격적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대비, 시설자재 전자목록을 고시했다.

조달청은 정부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시설자재 전자목록 시스템을 구축, 조달청 시설공사계약 원가계산 등 입찰에 활용하고 건설업계의 시설자재 표준코드로 사용토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에 고시한 시설자재 코드가 건설업계의 표준코드로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업종별 e-카탈로그 표준화가 가능케 되고 업계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연간 44조원 규모의 공공건설에서

1%만 비용을 절감하여도 연 4천400억원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10만5천여 품목의 시설자재에 대한 전자목록을 작성, 한국건설기술원 및 건설CAL 등의 건설전문기관, 건설시공사와 협의를 거쳐 설계·원가계산·시공·감리등 많은 관계회사들이 독자적으로 코드화 함으로써 코드가 중복되고 호환성이 결여되어 사용상 불편이 컸던 점을 이번에 개선했다.

